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어느새 1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220개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700만 명, 사망자는 170만 명에 육박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까지 합치면 세계 인구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세계보건기구)도 나온다. 2000년대 이후 유행했던 사스나 신종 플루,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꼽히는 지난 세기 스페인독감의 악몽이 떠오른다. 그로부터 100년,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인류는 바이러스 앞에 여전히 무력하기만 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우리는 지금 그 터널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까. 스페인독감은 첫 발생 이후 종식까지 2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역시 내년 말쯤이나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백신이 출시돼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시작했지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더욱이 인류가 자초한 기후 위기로 인해 감염병은 더 자주, 더 파괴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지만, 이런 재난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다.

코로나 창궐 공공의료 붕괴 위기

코로나 쓰나미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의 경우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공공보건과 의료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다. 확진자로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면 중증도에 따라 331만 원에서 최고 7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이 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

은편칼럼



강대석 시인·행정학 박사

바람결은 조금 차지만 불뿔처럼 포근한 햇살에 끌려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시골 뒷밭으로 향했다. 뒷밭에는 마늘, 양파 등 채소가 조금 심어져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을 핑계 삼아 시골에서 며칠 지내기 위해서다.

밭에 들어서자 초가을에 심은 양파와 마늘이 제법 빈 이랑을 채우고 바람에 일렁인다. 농사일이 서툰 주인의 손길에도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어우러진 모습이 대견하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무심코 양파 고랑에 꾸구리고 앉아 그들의 세상을 내려다본다. 멀칭 비닐 구멍마다 잡초가 피랴고 돋았다. 그 틈에 끼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양파가 머리카락처럼 가는 팔을 늘어뜨리고 바람에 떨고 있다. 멀리서 볼 땐 제법 푸른 밭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 풀들의 세상이다.

습관처럼 풀을 뽑는다. 가을 가뭄 탓인지 잘 뽑히지 않는다. 손으로 당기자 이파리만 뜯기고 만다. 할 수 없이 호미로 끊으니 그제야 몸통이 딸려 나온다. 온몸이 뜯겨도 뿌리만은 지켰다는 그들의 저항이 대단하다.

기 고



추한석 前 한국상조협회 사무총장 바림상조 대표이사

윤달이 포함된 2020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예를 매우 중시하여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돌아가신 분을 후하게 장사지내 왔다. 돌아가신 분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히는데 이를 수의(壽衣)라고 한다. 18세기 초까지는 혼인식이나 회갑 때 입었던 옷, 혹은 관복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부모님 생전 시 윤달 중에 길일을 택해 수의를 만들어 두는 풍습이 생겼다. 동국세시기에는 “윤달에는 모든 일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혼인하

감염병 시대,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이 방역 수준을 끌어올린 숨은 공로자인 셈이다.

코로나가 일개은 또 하나의 가치는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이다. 지금까지 확진자 치료는 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맡아 왔다.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를 책임져 온 것이다. 지자체 보건소들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확산 차단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하다. 2017년엔 9.2%였으니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온 국민에게 차별 없이 무상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100%)은 물론이고 캐나다(99.3%), 프랑스(61.6%), 독일(40.7%) 등과 격차도 너무 크다. 국내 의료기관 수로 따지면 더 열악해 전국 평균이 5.1% 수준이다. 이처럼 척박한 공공의료의 현실은 공공병원 확충 대신 민간 의료시장에 역할을 떠맡겨 온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민간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 의료 체계로는 감염병 대응은 물론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의존도가 높으면 과잉 진료나 의료비 증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취약 계층의 건강권 약화로 이어진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에 중환자 병상이나 음압병실이 부족해 수백 명이 자가 격리하며 기다리거나 심지어 대기 중에 숨지는 사태까지 속출했다.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빈발하다 보니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방역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됐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300명은 중증 및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100명은 감염내과나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로 선발하는 것이다. 한데 이 방안은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고 급기야 파업 사태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공공의료 확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 확대가 가장 절실한 곳은 전남 지역이다. 인력과 병상 등 의료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16년 기준 31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시의 두 배가 넘는다는. 한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명인 서울 3.1명, 광주 2.5명 등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일부 농어촌의 군 지역에는 필수 의료 과목인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응급환자를 거주지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권역으로 이송하는 전원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일까지 생긴다.

공공의료원·전남 지역 의대 절실

취약한 의료 환경 때문에 연간 80만 명이 광주나 서울 등 대도시를 찾고 있다. 그에 따른 지역 외 유출 비용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남에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의대 신설을 요청해 온 까닭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환영의 목소리를 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감염병 전남 지사는 지역의 의료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의료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역시 공공의료원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돼야 한다"고 각국에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비단 감염병이 아니라도 아프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선진 국가들이 의료 서비스를 상품이 아닌 공공 서비스로 여기는 이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는 국방만급이나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사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겨울 들녘에서

하긴 원래는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먹고살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생육에 방해가 된다고 뽑아내니 저항이 클 건 당연하다. 한참의 작업 끝에 풀밭이 양파밭으로 변했다. 뭐든 바꾼다는 것은 힘들다. 하물며 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은 얼마나 저항이 크겠는가?

배추 고랑으로 걸음을 옮긴다. 김장할 때 남겨놓은 처진 배추 몇 포기 추위에 움츠리고 있다. 누렇게 시든 이파리가 가랑잎처럼 떠서 팔랑인다. 집 없는 탈영이 한 마리가 붙어 있다. 지난가을 눈을 속이며 이파리를 갇아 먹던 그놈일 것이다. 서리가 몇 번 내렸는데도 배춧잎에 숨어 용케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집 없는 탈영이라는 이름부터가 측은하다. 삼라만상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에 제집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집 없는 설움이 어찌 저 미물에게만 있을까? 인간 세상은 더 끔찍한데!

올해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었다.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아파트값은 정책을 비웃듯이 집 없는 서민들을 울렸다.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전국적으로 874만 가구이다. (통계청) 더구나 비혼·이혼·졸혼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니 아파트의 공급 부족과 전세대란에 대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내겠다"고 말한 국토부 장관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속내를 보였을까 싶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광주 지역에도 서울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투기 세력이 몰려와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투기는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빼앗는 무자비한 행위로 빈부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득 어느 신문에서 본 칼럼의 내용이 생각난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만든 세계 각국의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43.3%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8%에 불과하다고 한다. 마치 100인이 있는 설국 열차에 상위 10%가 앞서서부터 43칸을 차지하고, 하위 50%는 탈랑 꼬리 2칸에 몰려 있는 형제이니 우리 사회의 빈부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려 있다. 밭 언덕의 역사가 바람에 쓸쓸이 거는 날린 채 가는 허리를 비비며 서적한다. 미루나무 빈 가지 끝에서 밭 주인을 지켜보던 까치들이 울음소리를 지우며 여름 속으로 사라진다. 겨울 들녘이 한 장의 수목화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근 식당에서 발생했다는 문자가 왔다. 매일매일의 안전 안내 문자가 공포 그 자체다. 이럴 때는 활동 반경을 줄이고 가급적 집안에만 있는 것이 최고의 백신일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제발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수의(壽衣) 문화’ 이젠 바꾸어야

는 것도 좋고 수의를 만드는 것도 좋다”는 기록이 있는데, 윤달에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부모님이 장수하고 효성이 자극하다고 여겼다.

수의의 소재로는 1363년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에 의해 들어온 면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서민의 옷감인 삼베가 주로 쓰였다. 17세기 이후에는 명주(비단)가 쓰였는데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했다. 19세기 말부터는 장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의가 제작되면서 삼베나 면이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국산 삼베 공급이 부족해져서 대부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풍습은 전통이러기보다는 다분히 장례용품 업체와 장례업자의 상업성에 기인한 바 크다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장례 절차가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사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바뀌어 2019년 전국 화장율은 88.4%이며 광주는 89.3%, 전남은 82.4%를 기록하고

있다. 화장 후에는 자연장이나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화장 시에는 화학첨유도 무방하나 대부분 중국산 값싼 삼베나 모시, 화학섬유인 이서·마사라는 것을 쓰는데 너무 거칠고, 복잡하며, 생산원이 대비 싸고, 품질이 좋지 않다. 또한 고인은 너무 생소한 옷을 입게 되어 이런 형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의를 윤달이라고 새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풍습과 같이 고인이 생전 시 혼인식이나 칠순 등에 입었던 옷, 고인이 아끼고 좋아했던 옷 등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 우선 수입량을 줄여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장례절차 중 비종이 큰 염습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고인은 전혀 입어보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유가족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사회환경과 장례문화가 바뀌에 따라 지금의 수의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옛 풍습을 살리고 다방면에서 유익한 평생복 수의 문화가 부활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국방부 기록 정정 40년 만에 폭도 누명 벗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들이 '전사자'(戰死者)에서 '순직자'(殉職者)로 바뀐다. 또한 군 문서에 희생자를 '폭도'라고 표기했던 부분도 모두 삭제된다. 지난 40년 동안 왜곡된 채 방치돼 왔던 군 관련 기록들을 국방부가 이제야 바로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옛 기록의 오류를 열어 그동안 '전사자'로 분류됐던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고 왜곡된 개별 사망 경위도 바로잡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은 모두 22명이며 이 중 한 명은 이미 순직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나머지 22명의 사망 경위는 '계엄군 상호 오인사격'(13명), '시민 교전 중 사망'(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등으로 정정된다. 군은 애초 이중 18명은 '폭도들의 총격'으로, 3명은 오인사격으로, 1명은 '폭도들의 칼'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심사위는 군 내부 문

서에 희생자들을 '폭도'라고 표현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기로 결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을 전사자로 표현한 것은 광주 시민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가 같은 기록은 극우 세력들이 5·18을 북한군 개입 및 일부 소요 세력에 의한 책동이라고 왜곡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한데 국방부는 수년간 정정을 미뤄 오면서 '죄무유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늦게나마 전사자의 순직 처리와 함께 '폭도'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전사자로 표기된 현충원 묘비 문구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5·18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군부 정권에 의해 조작되거나 왜곡된 기록들이 많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형 실리콘밸리’ 관건은 민간 투자다

광주형 일대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경제 공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광주형 실리콘밸리'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광주역 주변 1만4000㎡(4235평) 부지에 총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창업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역 일원에 광주형 창업생태계를 집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모빌리티, 5G-ICT(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에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엔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어우러지면, 광주가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기대처럼 한때 호남권 교통·물류·산업의 중심축이었다가 쇠락의 늪에 빠진 광주역이 '3대 메가 핵심 사업'을 통해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또한 지난 50년간 광주역으로 인해 단절된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남북 간 소통도로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민간투자 유치 여부다. 예상 투자사업비는 총 1조2000억 원인데 이 중 7493억 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통·산업·산업주거 등이 복합된 역세권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형 실리콘밸리' 사업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공을 들일으로써 광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집단지성으로 일컬어지는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사자성어로 '아시타버'(我是他非)를 선정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뜻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다. 교수신문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사자성어는 올해로 20번째인데, 신 공감을 얻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이 일부러 신조어까지 만들어 제시한 것은, 분열로 점철된 정치권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는 소모적 싸움만 벌어지며,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다.

과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렇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는 물론 코로나19 발생과 백신 공급을 두고도 사회 곳곳에서 '내로남불' 행태가 이어졌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분열의 생채기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가뜰이나 어려운 국민을 더욱 힘들게 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야당 정치인들은 연일 '공수처법 통과를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한때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찬성론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12년 10월 무소속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질 당시 사법개혁 10대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뀌니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에 강력 반발하면서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이라는 교수사회가 오죽했으면 '아시타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정치권을 비난했을까 싶다. 내년 신총선에는 올해 한국의 사회상을 압축해 보여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분열의 생채기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가뜰이나 어려운 국민을 더욱 힘들게 했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